

세계지방자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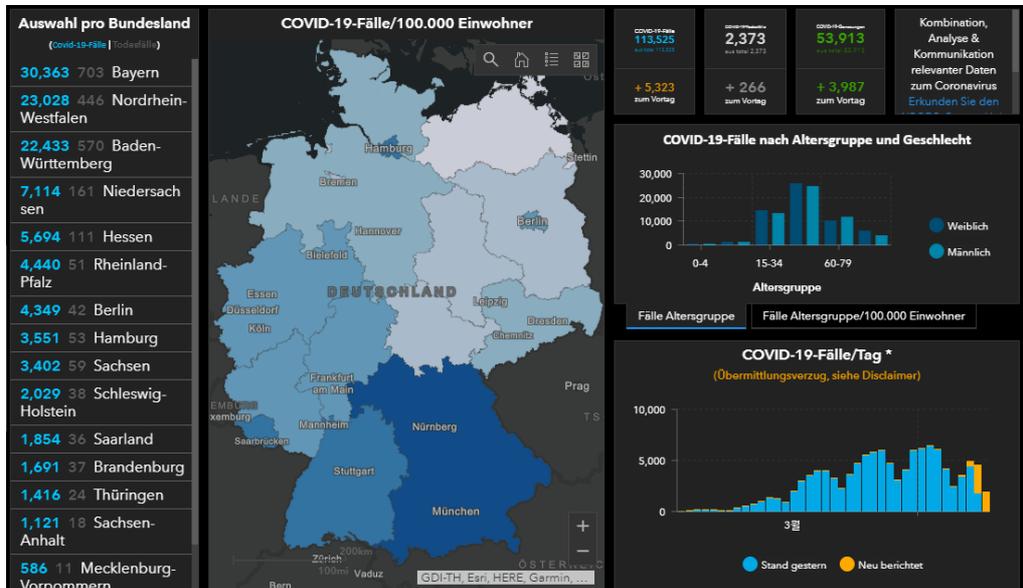
-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 (미국) 텍사스 주 Dallas County의 COVID-19 현황 및 대응
-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 (일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일본 정부 및 도쿄도의 경제대책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개요

- 2020년 1월 28일 독일의 첫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6명의 확진자를 유지하던 중 2월 2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이하 NRW) 주의 하인스베르크(Heinsberg)를 기점으로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었음
-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COVID-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원고의 모든 자료는 20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경우는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하인스베르크가 속한 NRW 주를 사례로 하였음

독일의 COVID-19 현황



| 그림 1 | 독일의 각 주별 COVID-19 누적 확진자 및 관련 현황(2020.4.10. 0시 현재)

- 독일의 COVID-19 누적 확진자 수는 4월 10일 현재 113,525명으로 초기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서부와 남부의 3개주(바이에른, 바덴-뷔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2만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듯 이탈리아 여행자, 초기 확진자의 카니발 축제를 통한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림 우하단의 일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4월 1주를 정점으로 4월 2주차에는 확진자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음

연방 및 지방정부의 대응책

시행일자	대응책	비고
2020.3.15	관내 대학의 시험, 강의, 연구활동 취소 및 여름학기 20일 연기	NRW 주정부
2020.3.16	독일 접경 5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국경통제 실시	연방정부의 조치
	생활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업시설 및 종교시설의 폐쇄,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 장거리 여행버스 운행 금지	
	전 국민의 국내외 여행 금지 권고	
2020.3.18	영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30일간 EU국가 입국금지	EU 및 쎅겐조약 국가 전체에 해당
	COVID-19 감염병의 심각성 호소와 대응을 위한 연방총리의 대국민 담화	연방정부
2020.3.22	연방 및 주정부 감염병 대응 화상회의 및 부활절 연휴까지 Abstand halten(사회적 거리 1.5미터 유지), Kontaktverbot(접촉금지) 등의 대응책 발표	연방 및 주정부
	NRW주정부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250억 투입 결정	NRW 주정부
2020.4.8	영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30일간 EU국가 입국금지 5월 15일까지 연장	EU 및 쎅겐조약 국가 전체에 해당

COVID-19 대응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논란

- 초기대응의 부실
 - 남부의 바이에른 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자의 근무지를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
 -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하인스베르크 거주자가 확진되었고, 이 확진자가 도시의 카니발 축제에 참가한 것이 알려지며 확진 하루 뒤부터 밀접접촉자를 찾아 자가격리 시켰음
 - 당시 확진자가 급증하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카니발 축제를 금지시켰는데, 독일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를 강행함으로써 독일 내 COVID-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음
- 기존 진료시스템 및 코로나 핫라인의 문제점
 - 독일의 진료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가정의학과에 해당하는 Hausarzt 및 전문의가 있는 Facharzt로부터 시작됨
 - 이러한 병원들은 평소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려운데, COVID-19가 확산되고 있는 3월초에도 지정병원 등을 선정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Hausarzt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진료 거부가 빈번히 일어나고,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병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음
 -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추세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도시별로 코로나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의심증상자는 Hausarzt를 방문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코로나 핫라인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여 대응 노선을 변경하였는데, 의심 증상으로 전화를 해도 통화량이 많아 1시간 이상 계속 연결을 시도해야 하고, 경미한 증상, 위험 지역 또는 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원화된 확진자 집계 시스템
 - 독일 내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던 3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로버트-코흐 연구소(Robert-Koch Institut)는 공식적으로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통계를 매일 발표했는데, 각 지방정부의 발표와 차이가 있어 일별로 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로버트-코흐 연구소장은 3월 17일 공식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확진자 집계 시스템이 이원화(연방정부: 전자집계시스템, 지방정부: 자체집계시스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4월 들어 일원화 된 확진자 집계 시스템을 갖추었음

COVID-19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노력

-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NRW주 및 각 도시들은 COVID-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함

1. NRW주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

- 3월 22일 각 주의 주지사들과 연방총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이후 NRW주지사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는 감염병으로 인한 250억유로(약 34조원)를 투입할 것을 발표함. 주지사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주정부 설립 이래 최초라고 밝히며 상황의 엄중함을 주지시키고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함
- 한편, 이 회의에서 결정된 Kontaktverbot(접촉 금지,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정책에 대해 NRW주는 주정부 중 유일하게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2. 지방정부간의 공조

- 인접도시인 아헨(Aachen)과 뒤렌(Dueren), 하인스베르크(Heinsberg)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과 아헨공과대학 부설병원은 3월 23일 공동의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은 COVID-19의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치료 병상을 2배가량 늘리는 방안과 각 지역의 병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참고로, 독일의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대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3.9병상으로 미국의 25.8병상, 이미 감염병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9.7병상, 8.6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대규모 중증 확진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3. 국가 간 지방정부의 공조

- 3개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아헨시에서는 3월 24일 아헨시장과 벨기에 내무장관이 국경에서 국경 차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독일과 벨기에의 감염병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음
- 이러한 협의에 따라 독일-벨기에 국경을 통과할 시에는 출퇴근 또는 병원진료를 제외한 필요하지 않은 국경 이동은 금지되었음



| 그림 2 | 영국 국경에서 벨기에 내무장관 de Crem(좌), 독일 아헨시장 Marcel Philipp(우)의 협의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 별도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원고에서 언급한 문제점 및 논란, 대응방안 등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 별도의 사후평가가 필요한 부분임
- 독일의 COVID-19 대응책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방정부(주정부)에 예산, 의료시스템, 별도의 감염병 규정 제정 등의 상당히 많은 부분 권한이 주어져 있고, 연방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 지방자치 중심의 연방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도 독일 내에서는 철저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론 기사, 칼럼,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연방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COVID-19 종식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